불교, '고령사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노인 포교 · 종무행정



포 교

가가호호 찾아가는 신행 시스템을

고령사회에서 고령층 인구의 종교활동과 고령층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어떻게 변하며 불교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보면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2005년 436만 5218명 → 2015년 654만 2704명)에 비해 고령층 종교인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이 눈길을 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중 65세 이상 인구의 종교인구 비율을 보면 2005년 63%에서 2015년 58.2%로 감소추세다. 여기에 고령층에서의 불자인구는 2005년 32.2%에서 2015년 25.7%으로 이웃종교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불자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2017년 김복필 석사의 '노인포교의 불교문화적 접근방안 연구' 논문을 보면 그 변화지점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종교를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 164명(불자 22명)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조사했다.

이 논문의 설문조사에서 65세 이상 불자들 중 신행활동을 위해 종교시설을 찾는다에 응답한 이는 19%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집에서 신행활동을 한다(57.1%)나 상황에 따라 주어진대로 한다(23.8%)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에서 65세 이상 이웃종교 신자들 중 개신교 80.9%, 가톨릭 55.6%, 원불교 64.9% 등이 종교시설을 찾는다고 답한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산간에 위치한 봉화 청량사와 서울 도심의 조계사에서 주지를 맡고 있는 지현 스님은 "조계사의 경우 어르신 불자들이 늘고 있지만, 봉화 청량사의 경우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며 "거동이 편치 않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사찰로 나오지 않는다. 산사에서 이제 셔틀버스 운영 등을 고민할 처지"라고 말했다.

고령불자 위한 재가신행 확대

이들을 위해 불교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장에서는 재가신행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불자 '가정 신행' 57%
"거동 불편해 산사 못 와"
재가 서비스 확대 필요성↑

비불자 '죽음, 가족안녕' 관심
상시설법, 교육의 장 필요해
"노인대학 개편, 상담 도입"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오랜 기간 사찰에 나오시다가 몸이 좋지 않아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사찰에서 외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가정에서 법회를 하거나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설법하는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며 "포교사단에서도 아직까지 가정방문 등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 포교사단도 계층 중심에서 사찰과 지역 중심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사찰에서 포교사들이 사찰신도회와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재가신행 서비스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前일본불교사연구소장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고령사회가 빨리 도래한 일본의 경우 기존신도들을 위한 단가 제도 외에도 월 두차례 스님들이 신청가정에 방문해 설법을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고령불자의 주변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전법으로도 이어진다"며 "일본에서 승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가호호 다니는 스님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다. 스님들이 고령자를 위해 좀 더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음 평안 · 가족 안녕 중심 설법 개발

이와 함께 고령층이 원하는 설법과 교육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먼저 고령불자들의 신행에서는 앞선 논문의 설문조사 결과 고령불자들은 기도(42.9%), 절(47.6%), 설법(38.1%)을 하고 있으며 독경(19%), 참선(14.3%), 봉사활동(0%) 등은 매우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들이 신행활동을 하는 이유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 68.2%로 첫 번째로 꼽혔으며,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가 63.6%로 두 번째 사유로 꼽혔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9.1%), 병환이 없기를 바라서(4.5%), 오래살도록 하기 위해서(0%),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0%), 사회봉사활동을 위해서(0%) 등으로 본인을 위해서는 신행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우리 사찰에서는 기도와 절은 어느때나 할 수 있지만 상시 설법이 없다. 일본 동본원사(東本願寺)의 경우 사찰 외에 전법회관에서 사람이 적든 많든 스님들이 상시로 법문을 한다. 고령층이 독경과 참선수행 등에 대한 접근보다 설법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비불자들에게도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일본에서는 상장례를 위해 유가족이 사찰로 오면 최우선적으로 종무소에서 전담스님에게 설법을 듣게 한다. 상장례를 포교의 기회로 삼는 것"고 말했다.

임정애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본부장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65세 이상으로, 불자와 비불자를 떠나 고령층에서는 자신의 죽음과 사후 가족의 안녕이 큰 관심사"라며 "이들의 마음을 불교계에서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들이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정토 사상 등에 근간한 설법, 그리고 '죽음'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비불자의 접근성이 높은 노인대학 등의 커리큘럼을 개편해 불교의 죽음에 대한 사상과 호스피스 교육, 가족상담 등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포교현장에서 고령층에 맞는 설법을 위한 기반자료 제공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무행정

'無人지역' 사찰, 전법·포교 '無소용'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사회적으로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은 2014년 일본 정부의 한 공직자였던 마스다 히로야라는 학자가 처음 사용한 말로,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을 지방소멸지수로 표시해 1.0 미만의 지역에 붙인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도 저출산 · 고령화로 농촌사회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0%)으로 조사됐다.

소멸위험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는데 경북 의성(0.151)이 가장 낮았고, 전남 고흥(0.161), 경북 군위(0.169), 경남 합천(0.171)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소멸위험 지역에 추가된 곳은 강원 철원(0.480)과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0.496) 및 김천(0.496) 등 지였다.

일반적으로 한국불교의 교세를 '동저서고(東低西高)'와 '농고도저(農高都低)'로 이야기한다. 즉, 전라 지역보다는 경상 지역에서, 도심보다는 농촌에서 불교의 교세가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들은 지방에 교구본사나 지방종무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농촌 등 지방에 주요 조직과 교세를 둔 불교는 고령 사회의 '지방소멸' 현상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 당장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는 의성, 합천, 경주, 김천과 같이 조계종의 교구본사가 자리한 곳이 존재한다.

'農高都低' 교세 가진 불교, '지방소멸'은 악재
광역단체 중 본사 부재 多… 교구 재편 고민을

이에 종무행정 전문가인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농촌 등 지방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불교는 '지방소멸' 현상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다"면서 "조계종의 경우 현재 교구 구역의 재편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실 조계종 교구 구역 재획정 주장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10년에는 실천불교승가회 부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서 '조계종 교구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교구 재편을 주장했다. 연구소는 "과거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현재에는 국가행정체계나 경제, 교통 등을 고려할 때 불편함이 많다"면서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교구본사의 장악력이 미치지 않는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관할권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현행 교구제를 비판했다.

조기룡 교수는 "시대가 변해 광역자치단체가 생겨났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 · 광주 등에는 교구본사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다. 이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사찰의 역사나 문중 간 문제도 있어 교구 재편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계도 학계도 현재 도심포교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농어촌 포교를 어떻게 할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면서 "도-농사찰 간 교류 활성화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교구 재편과 더불어 '거점 교구' 신설을 주장했다. 김응철 교수는 "사람이 없어 본사도 말사도 운영이 안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 교구 재획정이 어렵다면 포교와 행정을 위한 '거점 교구 본사'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일반행정 구역에 부합하는 거점 본사를 만들어 지역 수말사와 연결하면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 불교학의 고전『아함의 중도체계』,
27년 만에『붓다의 철학』으로 새롭게 개정증보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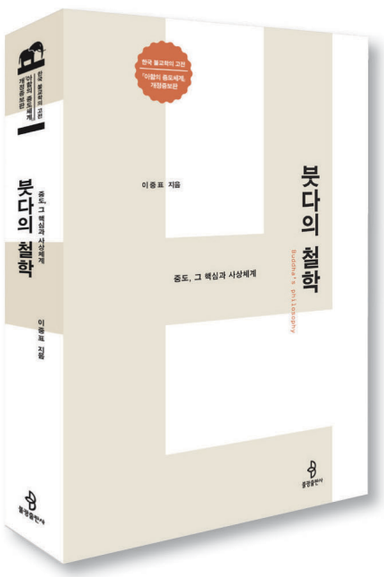
서양철학 그 이상의 붓다 철학을 논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학자 이중표 교수의 역작!

현대불교신문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혹자는 불교가 어떻게 철학의
제(諸) 문제와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 책에서 그 의문을 해소할 것이다."
_저자의 말

한국 불교학의 고전
『아함의 중도체계』
개정증보판



붓다의 철학
중도, 그 핵심과 사상체계

이중표 지음 | 464쪽 | 27,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의
영문판 출간에 이어 한국어 개정판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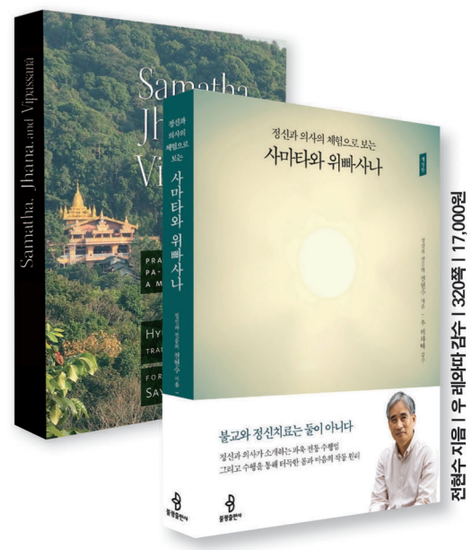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우 레와따, 크리스토퍼 거머 추천!

현대불교신문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심오한 메시지를 전한다."
_우 레와따 스님(세계적인 명상의 스승)

"붓다의 본래 가르침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바탕으로 수행법을 상세히 설명하여
불교 경전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_크리스토퍼 거머(마음챙김 심리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전현수 지음 | 우 레와따 감수 | 320쪽 | 17,000원

불교, '고령사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노인 복지 · 저출산

복 지

'자비' 바탕 둔 복지 네트워크 형성

고령사회, 노인 인구 증가로 복지 세분화 · 수요 달라져
활동층엔 참여프로그램 개발 · 취약층엔 재가복지로 케어
교구 할당제로 운영 지원… "호스피스 등 임종복지 필요"

불교계 사회복지 가운데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분야는 단연 '노인복지'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6개 주요 종단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총 920개 불교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이 43.4%(327개소)에 달해 영유아, 장애인, 아동 등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3개 종단이 운영하는 재단 산하 노인복지시설 비율은 각각 조계종 34%, 천태종 45%, 진각종 39%였다.

하지만,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며 그 층위는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욕구와 복지수요가 생겨나게 된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경제적 ·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수동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졌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양상이다.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기존 노인복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 정도였다"면서 "지금은 불교문화와 복지가 함께 가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 불교 문화를 접목한 복지는 힘이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라는 조어(造語)는 현재 노인복지 트렌드를 대변한다. '활동적 노화'는 신체적 · 정신적 활동성은 저하되지 않았지만 나이는 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새롭게 등장한 노인들 다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부양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짐에 따라 자녀와 생활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노인복지 현장도 새로 등장한 노년층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60세 이상 노인들은 월 30시간 봉사에 참여하면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불교계는 노인들이 처음 복지시설을 찾은 시점부터 상담을 통해 이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활동들을 추천, 연계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새롭게 출현한 노인 계층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자립도를 갖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노인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층위는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 역시 향후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1인가구가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해 노인 1인가구 비율은 23.6%로,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층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 진단한다.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생활 및 재가복지서비스 관련 시설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관 스님은 "불교 노인복지시설에서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재가 복지는 고령사회에서 가장 현실가능하면서도 꼭 필요한 서비스"라면서 "향후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한 노인 재가복지 불교 네트워크가 구축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국고보조형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식으로는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합한 운영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상길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은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불교노인복지 발전과제'에서 "노인복지시설 재정구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부보조금"이라며 "현재 정부의 지원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할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의 고유한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직영시설로의 전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 복지시설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은 서울(28.5%), 경기(14.2%), 경북(11.2%)에 집중돼 있다. 편차가 큰 지역 복지 서비스를 줄이고 해당 지역에 적합한 유형의 시설과 서비스 제반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동국대 불교학부 석좌교수)은 대안으로 '지역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성운 스님은 "지역책임제란 각 교구본사에 노인복지시설을 할당, 각 말사가 돌아가면서 예산 및 인력자원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며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중앙(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노인복지를 위한 제반 시설을 점차 직영시설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임종복지' 활성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성운 스님은 "고령사회에서 불교 노인복지의 성패는 임종복지 활성화"라며 "지역책임제 하에 불교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전문 시설인 '염불원'을 각 교구본사에 만들어야 한다. 일생정진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용맹정진하도록 불교의 임종관을 바탕으로 행복한 죽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저출산

수요층 공감하는 사업 우선돼야

저출산 극복해야 고령화 해결
現 종교계 '출산 장려' 사업들
'커플-성혼-출산' 유도에 그쳐
'가족=희망' 이야기할 캠페인을

고령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데 반해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저출산' 현상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를 줄이고 미래 연금가입자를 줄여 재정을 악화시킨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으로 급락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 ·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97명을 기록하면서 최근 재정추계에서 예상한 합계출산율 예상치 1.24명보다 낮아졌다.

이런 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는 '출산 장려'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종지협은 지난 4월 3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종교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포식'을 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지협은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 △생명존중 사상 전파 및 자살예방 노력 △임신 · 출산 · 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등을 위해 나설 것을 선언했다. 또한 결혼정보 가연과 협약을 맺고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에 협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실천키로 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일련의 캠페인과 사업들도 유사하다. 지난 2012년 고양 흥국사에서 처음 시작한 '산사의 싱글파티- 만남템플스테이'나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함께 그리는 다둥이 사회'는 만남을 유도하거나 올바른 연애를 할 수 있는 코칭들이 이뤄진다.

일련의 사업과 캠페인들은 '커플매칭 · 연애-성혼-출산'의 1차원적 도식을 가질 뿐 근본적 문제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통계청이 2016년 12월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초혼인 신혼부부 117만 9000쌍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41만 9000쌍으로 전체 35.5%에 달했다. 혼인 1~2년차를 제외한 3~5년차 부부 71만 5000쌍 중에서는 19.3%가 자녀를 낳지 않았다. 이 같은 통계서 단순히 혼인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혼부부들은 맞벌이 또는 무주택자일수록 자녀가 없었다.

일각에서는 '성혼-출산' 캠페인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출산 문제에서 경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본다. 미래 사회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안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사회다. 함께 살아도 불안한데 어떻게 행복한 결혼과 가족을 그릴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찰 내 가족상담센터가 있어서 가족 대상 연구와 상담이 필요하지만 전문인력이 전무하다"면서 "가족 교육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교와 함께 행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결혼이 곧 출산이라는 인식은 현대사회에 맞지 않다"면서 "불교 사찰 내 보육시설 설립이나 재정 능력있는 본사와 사찰에서 다자녀 신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나아가 저출산 사회에 맞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도 고민해야 한다는 고언도 나왔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찰에 아이들이 오려면 문화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스포츠나 음악, 미술은 좋은 콘텐츠"라며 "아이들과 대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보트레이딩
대표 이 한 용
우보익생 을 검색해보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49 (마두동) 강촌프라자 201호
TEL. 031-427-1274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문 영어학원
원장 문 순 옥
Moon's English Academy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00-2 아트빌딩 401호
TEL. 031-427-1274 FAX 031-388-5521